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제 안 년 월 일 : 2026년 2월 24일
제 안 자 :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1. 주문

○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서울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시민과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의무 이행 방식의 유연화와 징벌적 요금 차등이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지역별 차등 요금 산정 시 도심의 높은 배전 효율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인위적인 요금 격차에 따른 민생 피해 및 경제 공동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자본과 자원을 공유하여 상생할 수 있는 '지방-수도권 상생형 에너지 공유 모델'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와 토지 이용 구조상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소비량의 54%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발전 설비 확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할증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 시민이 납부한 막대한 국세로 구축된 국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며, 단일 공기업 독점 체제인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수도권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역차별적 정책임.

○ 특히, 서울은 배전 효율과 설비 이용률이 극대화된 지역임에도 정밀한 원가 분석 없이 요금을 가중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과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혁신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 방식의 다변화, 보상 중심의 정책 전환, 합리적 원가 산정 및 상생 모델 구축 등 제도 전반의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확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자,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고밀화된 토지 이용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대도시로 다른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분산에너지 목표 및 의무를 적용할 경우 시민 부담 증가와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약 25,962GWh로 전체 전력 소비량 47,296GWh 대비 약 5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상 불가피한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분산에너지 정책은 서울 시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시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단위 면적당 배전 효율과 설비 이용률이 극대화된 지역이다. 송전 거리상의 손실 못지않게 도심의 높은 배전 효율이 전력 공급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단순히 발전소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가중하는 것은 전력 공급

비용의 산정 구조와 지역별 공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라 할 것이다.

더욱이 2024년 기준 서울 시민이 납부한 국세는 약 115조 원으로 전체 국세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시민이 부담한 세금을 재원으로 국가 차원의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등의 전력 인프라가 지방에 구축된 상황에서 다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부담 또는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망 운영과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지역별 요금 차등이 시장 경쟁을 통해 자발적인 수요 조정을 유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지방의 전력망 인프라 확충 수준과 산업 생태계, 정주 여건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차등만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수도권 기업의 생산 원가만 상승시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서울시의 구조적 특성과 시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적용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어려운 대도시에 대해 분산에너지 의무 이행 방식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의 일부를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개선,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수요관리 실적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 성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분산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지역·건물·기업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 인센티브 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보상 중심의 정책 구조로 전환하라.

셋째, 정부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송전손실을 이유로 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실제 비용 구조와 인구밀도, 산업 집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시민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인위적인 전기요금 격차가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수도권 소상공인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충격 완화 대책과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서울의 자본·기술이 지방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투자되고 생산 전력이 장기 공급계약 등을 통해 활용되는 경우 이를 서울의 분산에너지 자립 실적으로 인정하는 ‘지방-수도권 상생형 에너지 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력계통 안정 및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